

재난 장기화 속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한 일본 인프라 복구 한계와 대응 과제

해당국가	일본	기관(기업)	일본 국토교통성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시설물
□ 일본 노토반도 지진 발생 이후 2년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복구 지연이 지속되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○ 지진에 따른 지형 변화와 기반시설 훼손으로 도로·항만 등 주요 인프라의 정상화 지연 및 지역 경제 회복 둔화 양상 - 해저 융기 등 지각 변동으로 일부 항만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선박 접근이 제한되는 등 지역 어업 기반 약화 상황 -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임시주택 거주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체 약화 우려 지속 ○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복구 속도를 제약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심 대응체계의 한계 노출 - 피해 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아 복구 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지역 유지 역량이 동시에 약화되는 구조 - 재난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보완 필요성 부각 □ 노토반도 사례는 일본 전역의 노후 인프라와 지역 소멸 위험이 결합된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며 재난 대응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확대 ○ 재난 이후 장기 복구 과정에서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와 지역 인구 구조 간 불균형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 - 수도·전력 등 기초 인프라 복구 지연이 지역 생활 여건 악화로 이어지며 복구와 인구 유지 간 악순환 구조 형성 - 지방 소규모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로는 대규모 재난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며 광역 단위 협력 필요성 제기 ○ 일본 정부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재건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복구와 지역 유지 간 균형 확보 시도 - 재난 관련 법·제도 정비를 통해 대응 체계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확대 방향 제시 - 지역 공동체 기반 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부각되며 사회적 인프라를 포함한 복구 전략의 중요성 인식 확대							

※ 출처 : Bloomberg(2026.01.01), Sinkholes and Quake-Hit Roads Expose Japan's Infrastructure Emergency
Nippon.com(2025.08.22), Failures of Noto Disaster Relief Drive Major Reforms Japan's Revised
Laws Target Infrastructure, Individuals